

국비지원율 명시 결국 무산 지방비 年 1천억 이상 든다

평창동계올림픽 특별법 시행령 차관회의 통과

도 재정자립도 22.5% 연간 가용예산 2,500억원 불과 식수전용저수지 건설 포기 등 대회 준비 차질 우려 이달 내 공포 앞두고 시행령 개정 필요성 강력 대두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 특별법 시행령(안)이 9일 차관회의를 통과해 이달 안에 공포될 예정이지만 벌써부터 '시행령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이 시행령 내용대로라면 재정자립도가 10~20%대인 도와 동계올림픽 개최 시·군의 재정상태로는 대회 준비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도는 동계올림픽특별법 시행령이 대회 관련시설과 올림픽파크 등에 대한 국비 지원율이 명시되지 않은 채 입법예고되자, 이를 수정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하지만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안에도 결국 이 같은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

다. 이에 따라 경기장과 진입도로 등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에만 내년부터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지방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경관 정비, 문화기반 확충, 안전시설 확충 등을 감안하면 매년 1,500억원 이상의 지방비가 필요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도의 재정자립도가 22.5%, 연간 가용예산이 2,5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2017년까지 도의 가용재산 대부분을 동계올림픽 준비에 투입해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시·군의 반발과 갈등, 불균형 발전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또 강릉은 2015년 열릴 전국체전

도 준비해야 해 동계올림픽 준비 예산 마련이 더 어려운 실정이다. 강릉시의 재정자립도는 28.9%, 평창은 14.6%, 정선군은 22.4%에 불과하다.

도는 평창군 대관령면 식수전용저수지에 대한 대폭적인 국비지원이 없다면 저수지 건설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모습을 보이는 등 벌써부터 동계올림픽 준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개·폐회식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방비 부담 최소화 방침을 세우고 있지만 여기에도 지방비를 투입해야 한다면 도의 재정부담은 더 커진다. 이에 따라 도는 개·폐회식장 건립비용은 개·폐회식 입장료, 방송권료 등의 수익과 국비로 전액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시행령을 일단 수용할 수밖에 없는 단계인 만큼 이를 바탕으로 최대한 절약해 대회를 준비하고 준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호기자 hokuy1@kwnews.co.kr

도 핵심 요구사항 모두 빠졌다

올림픽 특별법 시행령 통과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9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도 정치권에 따르면, 당초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난항을 겪던 개·폐회식장 국비지원이 포함돼 이날 차관회의에서 의결됐다.

개·폐회식장 건립을 위한 정확한 예산 규모는 용역 결과가 나와 보아 알 수 있지만, 대략 1,000억원 내외로 추산되고 있다.

반면 도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 관련시설 및 올림픽파크 내 경관형성 정비 대상에 대한 각각 70%와 50% 이상

올림픽 파크 등 각종 시설의 국비지원 명문화 안돼

개·폐회식 지원만 포함...지역건설업체 우대 여지 남겨

의 국비 지원은 결국 명문화되지 못했다.

대신 '기재부 장관이 국비 지원비율을 정하고 문화부 장관이 지원비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단서로 여지는 남겨졌다. 올림픽경기장 등 대회 기반시설 건설 시 지역건설업체 우대 문제는 '기재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협의해 지역우대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조항과 향후 장관 고시 사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올림픽파크, 동계스포츠컴플렉스 건립, 홍보관 등 IOC 관련시설, 대회조직위 사무실, 대회물자창고, 안전통제센터, 소송통제센터, 대회관계자 수송터미널, 대회 버스차고 및 차량 부대시설 등은 시행령에 들어가지 못했다.

식수전용저수지 역시 문화부 소관이 아닌 환경부 소관 사업이라는 이유로 시행령에서 빠졌다. 도와 도 정치권은 이에 현재 환경부에 광역특별

회계 예산이 아닌 별도 국비예산을 배정해 식수전용저수지를 건설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특별법 시행령은 오는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거친 후 20일께 공포될 예정이다.

새누리당 권성동(강릉) 국회의원은 "강원도 요구사항이 모두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면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향후 평창올림픽 시설과 관련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민왕기자 wanki@

“중소기업 신제품 특허 정부지원 절실”

중소기업들이 수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한 신제품이나 특허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9일 호텔인터블고 원주에서 강원경제인국제교류협회 주최로 열린 ‘이강후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정책적인 해결을 요구했다.

류제환 한일타엔씨 대표는 “정부로부터 연구비 보조비를 지원받고 여기에 자부담을 들여 수년의 노력 끝에 특허를 받아 제품을 개발했지만 조달청과 자치단체 등에서 특허 시비를 이유로 특허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며 “그렇다면 중소기업들이 굳이 신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용곤 대상엔지니어링 대표와 고광만 (합)동양하이텍 대표, 조덕용 조은제화 대표 등도 “신제품을 개발해 입찰에 참가하려 해도 공공기관과 자치단체 등에서 이에 대한 판매 실적을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전제하고 “해당 지자체마저도 지역업체의 새로운 제품을 써 주지 않는 데 무슨 실적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정홍걸 에드바이오텍 대표는 연구·개발사업과 관련, “중소 바이오 업체가 연구·개발을 해 성과를 내더라도 임상실험 등을 거쳐 상품화돼 시중에 나오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은 만큼 연구·개발 시작단계에서부터



◇강원경제인국제교류협회(회장 : 김영춘)가 주최한 이강후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가 9일 호텔인터블고 원주에서 열렸다. 원주=오윤석기자

원주서 ‘이강후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열려 평창동계올림픽 지역업체 참여보장 등 논의

대기업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강후 의원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성과가 공공기관 등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문제이지만 해당 부처에 대한마련을 요청하

겠다”면서도 “중소기업의 신제품 자체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용성 태백건설산업대표는 “2018 동계올림픽이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각종 공사와 납품에 지역 업체들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어

떤 식으로든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영웅 테어리젠 대표는 “일률적인 간폐를 및 용역을 제한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와 경제가 사는 데 많은 중소기업이 자금과 기술, 인력,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번에 건의된 다양한 목소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원주=이명우기자 woolee@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회식 국비 지원 법적 약속 받는다

특별법 시행령 차관회의 상정 의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지원을 위한 법적 정비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9일 차관회의를 열어 ‘2018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 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평창동계올림픽특별법 시행령)’을 상정, 의결했다. 시행령은 오는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이달 중순쯤 공포될 예정이다.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시행령 제안이유를 통해 “올 1월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및 장애인 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며 “이에 따라 대회 지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

영, 대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특구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도가 요구한 개·폐회식장에 대한 국비지원 등 일부 핵심 사안이 포함됐다.

그러나 또 다른 사안인 지역기업 우대를 비롯해 대회관련 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명시, 식수전용 저수지에 대한 국비지원 등은 빠졌다. 도 관계자는 “시행령에 반영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도의 요구가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박지은

고성~부산 720km 자전거길 생긴다

행안부, 내년부터 단계 조성

동해안 최북단 고성군부터 동해안을 따라 부산까지 720km를 잇는 국내 최장의 국토종주 자전거길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성된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성군에서 삼척까지 자전거길을 내년 말까지 우선 조성한 뒤 오는 2014년에는 부산까지 연결, 국내에서 가장 긴 국토종주 자전거길을 만들 계획이다.

행안부는 당초 국가자전거도로 3214km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동해안 자전거길을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하려 했지만 대국민 조사 결과 동해안 자전거길에 대한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아 가능한 2014년 말까지 앞당겨 완공키로 했다.

이와 관련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지난 7월 동해안 자전거길 조성 구간 확정을 위해 삼척과 동해 강릉 고성을 잇따라 방문,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에 조성되는 동해안 자전거길은 현재 국내 최장 자전거길인 서울~부산 자전거길 633km보다 90km 가량 길고 경포대와 낙산사, 죽서루, 망양정, 월송정, 삼일포 등 관동8경을 즐길 수 있는 코스로 만들어질 전망이다.

현재 도내 동해안의 경우 고성~삼척까지 해안선을 따라 국가 자전거도로망이 지정돼 있으나 아직은 지방도와 국도 등을 혼용하는 수준인데다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자전거길 완성을 위해서는 최대 수백억원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대규모 국비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속초/송원호